

東아시아의 海上 관할권과 石油

白根 旭

〈外大 中東問題研究所研究員〉

이 글은 현재 하와이 東西센터의 「Resource Systems Institute」에서 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시아(Mark J. Valencia)가 「Far Eastern Economic Review」(1988년 3월 31일자)에 기고한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서, 韓國·中共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징표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대륙붕 경계협정」의 체결을 지극껏 성사시킬 수 없게 만든 현실적 배경을 인접국들과의 관할권 문제와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탁월한 논문이다. 특히 동해상의 獨島에 대한 韓日 양국간의 관할권 분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동북아의 주요 해역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와 석유를 연계시켜 언급한 발레시아의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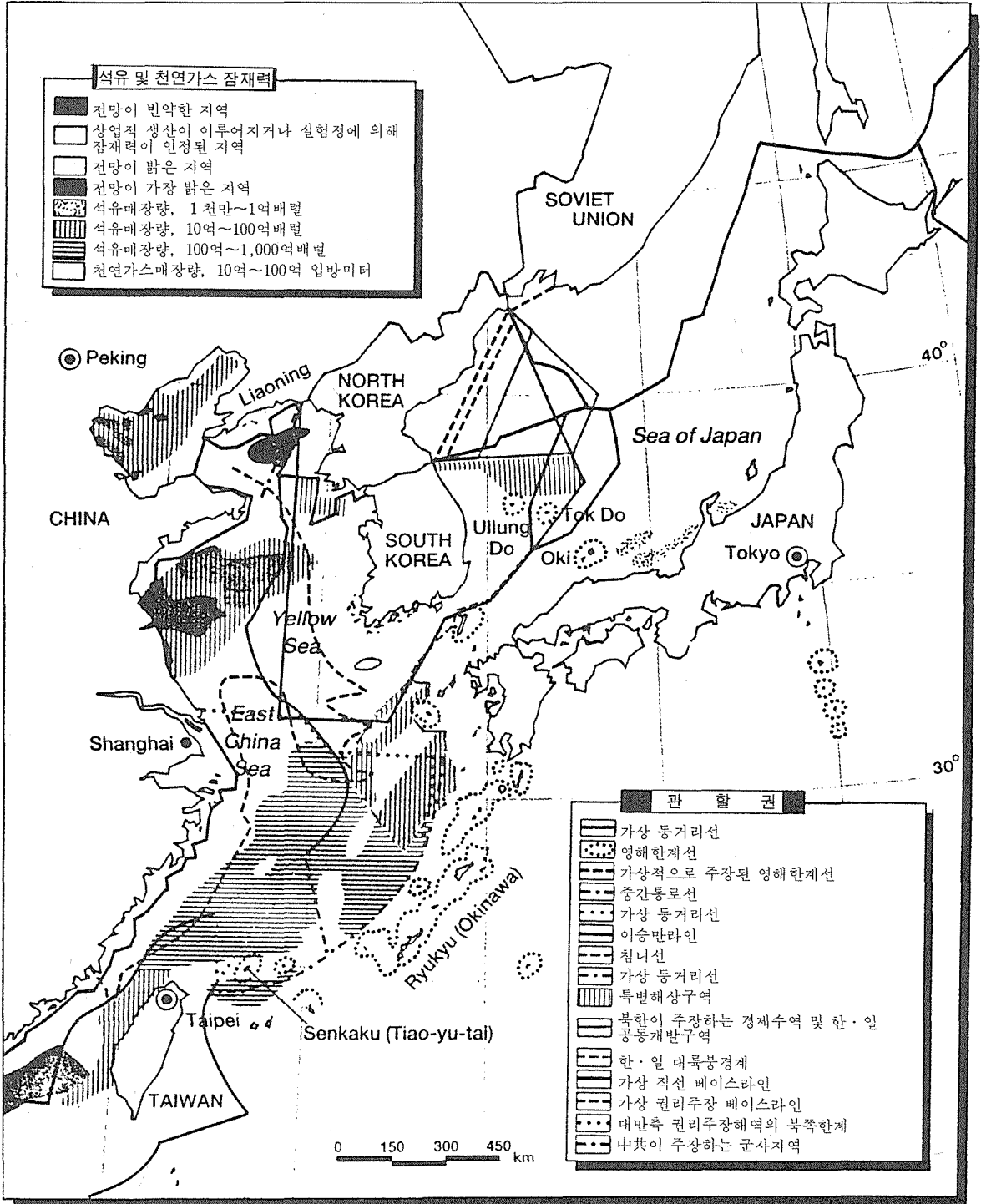
해양자원 및 활동에 대한 국가별 관할권의 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해양지역-황해, 동지나해, 그리고 동해(혹은 일본해)-에는 권리 주장이 가능한 지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해양지역의 상당부분은 권리주장이 중복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높은 일부 해양지역이 상당한 石油매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油價가 하락하고, 석유탐사 및 개발작업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石油수요량이 결국에는 石油공급량을 상회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東아시아의 해양지역은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아마도 전세계 국가관계에 있어서 대립이 가장 첨예화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적대관계 외에도 공산주의 세력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대치, 韓國 및 中共 내에서의 분단된 2개 체제의 대립,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蘇聯 및 中共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韓國, 日本, 中共, 그리고 蘇聯이라는 4개 國家와 6개 政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략적인 구도에 비추어 보아, 해양문제는 그 비중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체제간의 적대관계와 분쟁의 소지가 높은 대륙붕 지역에서의 石油매장가능성을 전제해 볼 때, 그러한 해양문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동아시아 해역도



◇沈泥線原則

실제로 혹은 가능성있는 대다수 해상경계분쟁은 諸島嶼들에 대한 영유권 내지는 이례적인 권리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中共은 대륙으로부터 침식된 침니(沈泥)들이 퇴적된 대륙붕 지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즉, 「沈泥線原則」(Silt Line Principle)을 주장해 왔다. 만약 中共이 침니선원칙을 주장하거나, 대안적으로 遼東半島에서 69km 떨어진 Haiyang島로부터 확장되는 排他的인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을 주장한다면, 中共과 북한 사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침니선을 따라 이루어진 경계는 西韓灣(Bay of Korea)의 거의 전체에 달하는 해역을 北韓에 귀속되게 할 것이지만, 만약 그 경계가 中共·北韓의 연안으로부터 等距離에 해당되는 中間線이 된다면 그 해역의 대부분 지역은 中共에 귀속되고, 석유매장가능성이 높은 퇴적층지역의 단지 일부만이 그 中間線을 중심으로 北韓側に 속하게 될 것이다.

◇東海의 문제

東海(혹은 日本海)의 경우, 1974년 韓國과 日本간에 그어진 대륙붕경계는 한국명으로 獨島, 일본명으로는 竹島로 알려 진, 한국의 울릉도로부터 동쪽으로 29km 해상에, 일본의 오키(隱岐)島로부터 북서쪽으로 50km 해상에 위치한 리앙꾸르(Liancourt)岩島로부터 70해리 해상지역에서 중단되었다. 獨島는 사람이 살기 힘든 섬이며, 해양법하에서 비록 12해리의 영해권은 갖지만, 排他的인 經濟水域(200해리까지 이를 수 있음) 혹은 대륙붕은 갖지 못한다. 1952년 이래 한·일 양국은 16,600평방해리에 달하는 해상 및 해저지역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해주는 獨島영유권에 대한 논쟁을 벌여 왔다. 현재 獨島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

東海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쓰시마(Tsushima)분지의 북동쪽지역과 야마토(Yamato)웅기대 및 해구의 남서쪽 지역을 포함하는 다면체 지역이다. 만약 日本이 獨島를 영유하게 된다면, 日本은 쓰시마분지의 북동쪽 지역과 야마토 웅기대 및 해구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만약 韓國이 獨島를 영유하게 된다면, 그 경우 韓國은 야마토 웅기대 및 해구의 남서쪽 가장자리

시대 뿐만 아니라 쓰시마분지의 북동쪽 지역까지도 장악하게 될 것이다.(발렌시아 연구원은 한국의 獨島領有權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東海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는 南·北韓간에, 그리고 北韓·蘇聯간에 存在한다. 北韓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지역과 排他的인 經濟水域의 경계는 兩 인접국과의 가상적인 等距離線보다 훨씬 확장되어 설정되어 있다. 北韓이 주장하는 배타적인 경제수역은 日本이 獨島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했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 가상적인 등거리선을 훨씬 넘어 설정되어 있다.

◇黃海의 문제

黃海盆地는 10억에서 10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매장량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상당히 밝다. 황해의 침니선경계는 전체 분지가 침니선을 중심으로 中共側 해역에 속하게 할 것이다. 만약 그 경계가 등거리선이 될 경우, 황해분지의 대부분 지역은 中共側に 속하게 될 것이지만, 石油매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끝부분을 포함하여 석유매장잠재력이 높은 퇴적층 지역의 돌출부분 중 절반은 韓國측에 속하게 될 것이다. 韓國정부의 승인하에, 등거리선을 중심으로 韓國側に 속한 해상지역에서 시추된 3개의 탐사정은 乾孔(Dry Hole)으로 판명되었다.

◇동지나해의 문제

100억에서 1,000억배럴에 달하는 石油매장잠재력을 갖는 東支那海에서는 대만 북동쪽 90해리 해상지역에 위치한 5개 珊瑚島로 구성된 센카쿠(尖閣: Senkaku, 中國式 명칭으로는 釣魚臺: Tiao-yu-tai)群島에 대해 中共, 台灣, 그리고 日本이 독자적인 권리주장을 펴고 있다. (센카쿠 紛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번역자의 「中共石油: 石油紛爭要因과 韓國의 立場」 참조) 센카쿠군도의 점유는 육지쪽으로 향한 等深線 200m의 대륙붕지역 11,700평방해리에 대한 권리획득을 의미한다.

1972년 3월 日本은 台灣이 아닌 中共과 센카쿠군도에 대해 협상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日本은 台灣과의 거래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中共과의 협정체결을 크게 서두르지 않았다. 日本은 센카쿠군도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석유탐사에 대해 어떠한 制裁도 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쪽 東支那海域에서의 中共,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등거리선은 中共에 최대 영역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台灣-Sinzi盆地를 분할할 것이다.

中共은 그 등거리선의 반대편에 위치한 분지 중앙의 동쪽 편에서 石油를 발견했다. 만약 침니선이 경계가 되었다면 中共이 그 분지 북부 중심지역의 가장자리는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분지 대부분 지역의 관할권은 한국과 일본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침니선경계는 黃海에서는 中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北韓지역의 西韓灣과 東支那海에서는 中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台灣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의 북쪽 경계는 이러한 분지들 중 석유매장잠재력이 높은 퇴적층들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남쪽 東支那 海域에서 문제가 되는 해역은 최소한 3개 주요 하부분지를 함유하는 사다리꼴 해역이다. 그 주요 분지들은 분지내 북쪽 2/3지역과 남서쪽 구석지역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들 2개 하부분지는 센카쿠군도를 둘러싼, 석유매장잠재력이 낮은 해역에 의해 구분된다.

만약 센카쿠군도가 中共에 속한다면, 퇴적층이 가장 두꺼운 해역을 포함하여 그 해역의 대부분은 中共이 영유하게 되겠지만, 日本은 台灣-Sinzi분지와 오키나와(沖繩)해구분지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두꺼운 퇴적층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센카쿠군도가 경계설정에 있어 무시된다면, 東支那海의 남쪽 분지는 지역 및 퇴적층 두께에 따라 거의 공평하게 분할될 것이다. 만약 센카쿠군도가 일본에 속한다면, 비록 乾孔을 양산하면서도 中共이 1개 石油매장지를 발견했던 해역은 中共에 귀속되겠지만, 그 분지의 보다 많은 부분은 日本이 영유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오키나와 해구의 軸이 경계가 된다면, 그 분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中共이 영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센카쿠문제가 설혹 中共에 유리하도록 원만하게 해결된다 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잔존한다.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日本의 군도들과 中共 本土간의 등거리선은 육지쪽으로 향한 等深線 200m의 아시아 대륙붕지역 9,000평방해리가 그 등거리선을 중심으로 日本측에 속하게 된다. 中共은 광범위한 인접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대륙붕이 琉球群島 주변의 오키나

와해구에서 수심 2,000m 깊이로 끝난다고 주장한다. 日本은 그 해구가 中共·日本 양국간에 연장되어 있는 대륙붕 가장자리에서 일시적으로 합몰한 것일 따름이며, 그 등거리선이 적정한 경계라고 주장할 지 모른다.

◇中共과 인접국들의 대륙붕문제

中共은 黃海 및 東支那海에서의 경계설정에 대한 해결은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들을 포함한 多國間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에서 대륙붕문제의 논의를 거듭 제의한 日本의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대륙붕문제를 中共과 논의하고자 한 韓國의 노력은 中共이 한반도에서 北韓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까닭으로 인해 계속 수포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韓國의 모든 조광권 계약이 허용하는 외곽경계는 中共과의 마찰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中共은 인접국들과 권리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예비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추리그(Rig) 및 탄성파탐사선들을 파견해왔다. 예를 들어, 龍井(Longjing)1 시추정은 서울당국이 黃海 및 東支那海의 인접지역들의 자원을 분할하기 위한 근거로써 제시하는 韓國·中共간의 假想中間線을 64km이상 월경한 지역에 위치했다.

1981~82년의 龍井I과 II, 東海(Donghai)1, 그리고 Pinghu1 이래, 中共은 東支那海의 논란대상해역에서 매년 최소한 1개 탐사정을 시추해왔다. 中共은 韓國과 日本의 共同開發區域(Joint Development Zone)경계에 인접한 해역에서 「성공적인」 시추를 해냈음을 예로 들어 中共이 그 해상권리에 대한 유일한 대표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계설정협정에 日本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정발견을 이용할 지 모른다.

◇中共의 접근방법

中共관리들은 지역경제적 필요와 협조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극히 제한된 「형식주의적」 혹은 「역사적인」 접근방안 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고 시사해왔다. 그것은 日本이 협조적인 石油협정을 위한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센카쿠군도에 대한 권리주장을 중단하는 데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中共이 센카쿠군도가 대만의 일부라는 이유에 근거하여 센카쿠군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限, 東京당국과의 충돌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

다.

台灣문제와는 별도로, 1981년 初에 龍井1을 계속 추진하려 한 北京당국의 결정은 공식적인 해저협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했던 中共·日本간의 비밀사전협상이 난항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극받았던 것 같다. 1980년 11월 4명의 일본인 해양법 전문가가 비공식회담을 위해 北京을 방문했지만, 합의사항 도출에는 실패했다. 東京당국은 등거리선 접근방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전체 대륙붕을 대륙의 자연연장으로 간주하여 대륙붕권리를 당연시하는 「自然延長原則」(Natural Prolongation Doctrine)을 주장하는 北京당국은 대륙붕에서 日本측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石油매장지의 일부를 中共에 부여하게 될 공동개발구역(JDZ)의 설정을 옹호했다.

中共은 東支那海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한 합동조사에 日本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中共의 이러한 요청에 일본의 帝國石油會社가 北京에 대표사무소를 세웠다. 또한 中共은 台灣에 대한 접근을 계속했다. 실제로 1981년 中共의 성공적인 유정발견에 대한 발표가 난 바로 몇 주 후에 中共은 현재 알려진 해저석유자원의 공동개발을 포함한 再統一會談을 위해 台灣측에 9가지 사항의 제안을 내놓았다.

◇몇개의 해결방안

가능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의 시나리오는 등거리선에 대해 中共과 日本이 동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台灣은 묵시적으로 中共의 독립자치구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台灣은 아마도 台灣 최북단의 해저조광권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조건으로 워싱턴, 東京, 그리고 北京으로부터 제시되는 경제적 혜택에 설득당할 수도 있다. 그 경우 台灣은 경제적 자치권을 계속 보유하겠지만, 中國대륙에 대한 관할권주장에 근거한 해저권리주장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北京과 台北당국은 등거리선을 중심으로 中共측에 매장된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지 모른다. 中共은 北京의 中國海洋石油總公司(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와 대륙의 中國石油公司(China Petroleum Corp.)가 대륙이 東支那海上에 부여한 조광권을 갖는 美國 석유회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합작투자회사들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타협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

만이 독자적으로 「지역적인」지역을 개발할 수 있음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美國과 日本이 北京당국을 中國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 시나리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北京당국이 합법적으로 中國의 해저권리를 대표하며, 日本으로서도 그 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中共·日本간에 모색되는 협정은 보다 포괄적인 협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北京과 東京당국은 성의있게 경계설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에 그들은 본격적인 공동개발구역 프로그램을 착수함에 앞서 그 지역의 石油자원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개발은 특별히 中共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韓國과 상대할 경우에 계속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자연연장원칙에 근거한 대륙붕에 대한 여타 법적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中共은 中共 대륙붕내 여타 지역에서의 石油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日本의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대안적인 방법은 경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그 해역을 상이한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동개발구역협정은 자연히 해저지역의 일부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군도 영유권문제

센카쿠군도에 있어 그 자체에 대한 영유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센카쿠군도는 경제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대륙붕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기저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다수 쌍무조약들은 경계설정에 있어 소규모 군도들의 영향력을 무시한다. 下記하는 선택권들 속에서 첫번째 단계는 센카쿠군도를 둘러싼 12해리 영해에 대해 동의하고, 그 해역을 공동사용과 장애해결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그 해상지역은 上海 바로 아래와 日本 본토의 최남단을 관통하면서 東支那海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북위 30도선을 따라 남·북 해상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 등거리선 원칙은 북쪽 해상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존재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지만, 그 경계는 공동개발구역의 서쪽 가장자리가 될 수 있다. 남쪽 해상지역에서는 오키나와 해구가

공극적인 경계가 될 수 있다.

中共 동부 및 유구제도 해안의 길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해안선 비율을 활용하여 등거리선 경계는中共에게 유리하게 64대36의 비율로 남쪽 해상지역을 분할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둘째, 東支那海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 해상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등거리선은 북쪽 해상지역에서 경계로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그 경계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동경 125도 북위 28도 15분에 이르는 등거리선의 남서쪽을 따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동개발구역은 日本의 센카쿠군도 영유권에 근거한 등거리선의 북서 및 남서쪽과中共의 센카쿠군도 영유권에 근거한 등거리선의 북쪽, 그리고 오키나와 해구의 중간통로선의 남쪽 및 남동쪽을 접경선으로 하는 해상지역이 될 것이다.

셋째, 中共과 日本은 남·북 해상지역에서의 공동개발에 동의하고, 오키나와 해구를 무시한 채 해안선의 비율에 의해 수정된 잔여지역에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넷째, 中共과 日本은 中共本土와 일본 사이의 등거리선과 200m 등심선 혹은 중간통로선, 그리고 韓日 공동개발구역의 남서가장자리에 의해 경계지워지는 해역의 공동개발에 동의할 것이다.

◇ 韓國과 中共간의 대륙붕문제

黃海의 경우, 韓國과 中共간의 대륙붕 경계설정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군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없다. 서울당국은 北京당국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갈구한다. 中共은 협상할 용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껏 그로 인해 나타난 성과는 없었다. 먼저 그것은 北京당국이 서울당국과의 경계협정에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논란지역의 石油잠재력이 그리 대규모가 아니며, 中共으로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여타 해저지역에서 石油자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中共이 韓國과 협상을 전개하는 것은 2개의 韓國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中共은 韓國과의 경계문제는 그대로 방치해두기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우는 이루어 질 것 같지 않

만, 中共과 韓國간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中共이 등거리선으로부터 불과 80km의 해상지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경제문제의 해결, 아마도 공동투자의 채택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을 자극하게 될 것 같다. 그러한 과정에 들어서기 위해, 韓國은 中共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등거리선 주장을 수정하고, 그럼으로써 中共의 침선 주장과 등거리선 사이의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동의할 지 모른다. □

